

의안
번호

1314

창원특례시 계약심사 전담조직
신설 촉구 건의안
(김혜란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창원특례시 계약심사 전담조직 신설 촉구 건의안

(김혜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4
----------	------

발의연월일 : 2026. 4. 21.

발 의 의 원 : 김혜란 · 구점득 · 김묘정 · 김수혜 · 김영록
박승엽 · 안상우 · 이원주 · 이정희 · 이해련
전홍표 · 최정훈 · 한은정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공공계약은 시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출발점으로서 재정 건전성과 행정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나, 우리 시의 현행 계약심사 체계는 전담 조직 부재와 일부 소액 계약의 사전 검증 한계로 인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조달 자율화 정책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조직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2. 주요 내용

- 계약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공공계약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할 것을 촉구함
-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건의함

3. 건 의 문 : 붙임

4. 수 신 처 : 기획예산처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조달청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창원특례시 계약심사 전담조직 신설 촉구 건의문

창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조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원특례시에 계약심사 전담조직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함께 건의한다.

현재 창원특례시는 감사관 소속 일상감사팀을 통해 계약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낮은 금액 기준 적용을 통해 작년 기준 약 89억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약심사가 전담 조직 없이 운영되면서 한계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사실상 사전 단가 검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반복적·유사 계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관리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조달 자율화 정책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책임성과 자율성은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약 20년간 4조 원 이상의 예산 절감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경기도,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등도 수백억 원 규모의 절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기초 및 특례시에서도 전담조직 운영 여부에 따라 성과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용인·화성·고양특례시는 높은 절감 성과를 기록한 반면, 일상감사와 병행하는 구조의 수원특례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조속히 신설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심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반복·유사 계약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계약관리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전문 인력 확보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창원특례시는 계약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조속히 신설하라!

하나. 창원특례시는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심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재정·인력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4월 일

창 원 시 의 회